

2026년 공공조달관리사 필기 출제기준 기반 모의고사 10회

자료 성격: 출제기준형 · 2026-10-03 · 문항 수: 80 · 근거 기준일: 2026-09-15

성명		점수	/ 100
----	--	----	-------

AI로 작성한 자체제작 예상문제입니다. 해설 편집 검토일 2026-10-04. 29·67번의 조건·보기를 명확히 했습니다. 공식 기출문제나 전문가 인증 자료가 아니며, 문항별 적용 기준과 근거는 웹 해설에서 확인하세요. 정답과 해설은 license.3001.co.kr의 같은 제목 게시물에서 확인하세요.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1. 교육기관은 필요한 기자재를 적기에 확보하는 목표와 함께, 적용 가능한 제도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히려 한다. 두 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1) 정책 지원 목적이 있으면 기자재의 성능 충족은 검토할 필요가 없다.
- (2) 필요 자원의 확보라는 운영 목적과 정책 지원 목적을 함께 고려한 것이다.
- (3) 적기 확보와 정책 지원은 같은 개념이므로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
- (4) 두 번째 목표는 어떤 경우에도 공공조달 목적에 포함될 수 없다.

2. 공공부문의 전력 수요를 공기업이 공급하는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1) 거래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공기업도 공급자가 될 수 있다.
- (2) 공기업이 공급하면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다.
- (3) 공기업은 모든 거래에서 구매자만 될 수 있다.
- (4) 공기업이 공급하면 조달 대상은 반드시 공사이다.

3. 교재가 공공조달 담당자의 책임을 설명하며 함께 강조하는 두 측면은?

- (1) 개인 투자수익과 주주 배당의 책임
- (2) 기업 광고와 브랜드 판매의 책임
- (3) 행정서비스 제공의 책임과 계약 수행에 따른 경제적 책임
- (4) 심판 선고와 형 집행의 책임

4. 친환경 성능을 높이는 대안이 제시되었으나, 해당 대안은 필수적인 응급업무 처리 성능을 충족하지 못한다. 정책목표 간 균형을 고려한 검토로 적절한 것은?

- (1) 어떤 정책목표도 수치화할 수 없으므로 담당자의 선호만 따른다.
- (2) 기본 업무수행이 가능하면 환경 관련 요소는 검토 대상이 아니다.
- (3) 환경목표가 포함되면 기본 업무수행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는다.
- (4) 기본 조달수요의 충족과 환경목표의 편익·비용을 함께 검토한다.

5. 분산형 구매 도입 후 현장의 요구 대응성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평가하려 한다. 가장 직접적인 비교 지표는?

- (1) 기관 전체 인쇄용지 소비량만의 변화
- (2) 요구 접수부터 사용 가능한 공급까지의 시간과 현장 필수요건 반영 수준
- (3) 총구매금액의 증가만
- (4) 담당자 전자우편 계정 수만의 증가

6. 소규모 단순 시설관리 용역에 대규모 특수시설 운영 실적만을 요구하려 한다. 제한수준을 검토할 때 우선할 관점은?

- (1) 실적 기준은 정량적이면 그 수준의 적정성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 (2) 업무의 난이도와 규모에 비해 요구 실적이 과도한지 비교한다.
- (3) 참가업체가 줄어들수록 제한기준이 우수하다고 본다.
- (4) 이전 공고에 있었으면 현재 업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지 않는다.

7. 지명할 업체 목록을 만들 때 담당자의 개인적인 거래 경험만 이용하고 신규 전문업체는 조사하지 않았다. 보완할 사항으로 적절한 것은?

- (1) 새 업체의 존재는 확인하되 선정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임의로 바꾼다.
- (2) 담당자가 알고 있는 업체의 상호를 가나다순으로만 정렬한다.
- (3) 기존 업체가 불편해할 수 있으므로 공급능력은 조사하지 않는다.
- (4) 시장조사와 객관적 선정기준을 통해 적합한 공급자 범위를 확인한다.

8. 가상 소액구매 견적에서 A는 물품 90만 원과 배송 8만 원, B는 배송 포함 96만 원을 제시했다. 두 견적 모두 세금 포함이며 성능과 조건은 같다. 총지출 기준 판단은?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 (1) B가 2만 원 저렴하다.
- (2) A와 B의 총액은 같다.
- (3) A가 6만 원 저렴하다.
- (4) B가 8만 원 비싸다.

9. 동일한 유형·건수의 조달업무 처리시간이 전자화 전 120시간에서 후 84시간으로 줄었다. 감소율은?
- (1) 36%
 - (2) 70%
 - (3) 42.9%
 - (4) 30%
10.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수요기관이 비교·선택하는 상품의 기본적 성격은?
- (1) 조달청의 관련 계약을 거쳐 등록된 물품·서비스
 - (2) 사용이 끝난 자산만을 처분하는 경매 대상
 - (3) 업체가 계약과 무관하게 올린 모든 개인 중고품
 - (4) 조달기관의 직원 개인에게 판매하는 전용 상품
11. 벤처나라 제품 검토자료 중 기술개발의 차별성 자료와 내구성 시험성적서는 각각 어떤 측면에 더 직접 연결되는가?
- (1) 부동산 위치 / 거래은행 지점
 - (2) 지급계좌 / 공사준공 일정
 - (3) 기술성 / 품질·성능의 신뢰성
 - (4) 기관 예산액 / 대표자의 근속기간
12. 정확한 물품식별번호를 알고 있는 담당자가 해당 모델의 상세 속성을 확인하려 한다. 적절한 접근은?
- (1) 다른 모델의 사진만 보고 같은 제품으로 간주한다.
 - (2) 같은 기관이 과거 산 모든 품목을 같은 상품으로 취급한다.
 - (3) 해당 식별번호로 품목을 검색해 상세 정보를 확인한다.
 - (4) 식별번호를 버리고 대표자 이름으로만 검색한다.
13. 해외 자료에는 8자리 UNSPSC가 있고 국내 공고에는 10자리 세부품명번호가 있다. 두 자료를 연계할 때 적절한 방법은?
- (1) 국내 물품식별번호를 해외 기업의 사업자번호로 사용한다.
 - (2) 공통 분류와 국내 세부분류의 대응관계를 확인한다.
 - (3) 자리 수가 다르면 같은 제품군일 가능성은 없다.
 - (4) 끝의 두 자리를 임의로 모든 해외 코드에 붙이면 검토가 끝난다.
14. 경쟁제품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필요한 중소기업 및 직접생산 요건을 충족했다. 이후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실시하는 주된 이유는?
- (1) 경쟁제품의 지정기간을 새로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 (2) 참가할 수 있는 업체 중 실제 계약을 이행할 능력을 낙찰기준에 따라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 (3) 입찰참가자격을 갖추면 이행능력의 차이가 없으므로 추첨을 대체하기 위해서이다.
 - (4) 중소기업확인서를 직접생산확인서로 전환하기 위해서이다.

15.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으로 확정된 자재를 발주기관이 별도로 구매하여 시공자에게 제공한다. 이 구조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1) 자재 제조업체가 공사 전체의 시공자로 자동 변경된다.
- (2) 시공자가 자재를 구매한 뒤 기관에 영수증만 제출하는 구조이다.
- (3) 기관이 자재 구매를 담당하고, 시공자는 제공받은 자재를 공사에 사용한다.
- (4) 시공자가 기관의 자재 구매대금을 대신 결정하고 기관은 완성 공사만 인수한다.

16. 업체가 환경성적표지 인증서를 제시하며 "이 인증서를 가진 모든 제품은 저탄소제품으로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교재의 제도 구별에 따른 검토는?

- (1) 환경성적표지는 저탄소제품 인정과 명칭만 다른 동일 제도이다.
- (2)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공개하면 감축 여부와 무관하게 저탄소 인정이 끝난다.
- (3) 저탄소 여부는 제품가격이 낮은 순서로 정하므로 인증서를 볼 필요가 없다.
- (4) 환경성적표지 보유와 저탄소제품의 추가 인정요건 충족을 구분해 확인한다.

17. 성능 검증을 받은 신기술 제품도 구매실적 부족 때문에 초기 시장에 진입하기 어렵다.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정책이 이러한 상황에 개입하는 취지로 적절한 것은?

- (1) 개발비를 많이 지출한 기업부터 납품검사를 생략한다.
- (2) 민간 구매실적이 없는 제품은 공공구매 검토에서도 제외한다.
- (3) 성능 검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매기관의 실제 수요를 모두 대체한다.
- (4) 공공부문의 초기 구매 기회를 활용하여 개발성과의 시장 진입을 뒷받침한다.

18. 공공현장에서 혁신 성능을 확인할 시범사용 제품을 고르려 한다. 후보 A는 작동 가능한 시제품과 검증계획이 있고, 후보 B는 기초 아이디어만 있어 시범사용 기간에 제품 구현조차 어렵다. 교재의 혁신시제품 설명에 가까운 판단은?

구체적인 TRL 숫자·지정기간 등 개정 가능성이 있는 요건은 묻지 않으며, 두 후보의 구현 가능성은 지문에서 확정한 가정입니다.

- (1) 시범사용은 원천이론 연구만을 뜻하므로 실제 제품 작동은 대상이 아니다.
- (2) 아이디어만 참신하면 제품 구현 가능성과 시험계획은 검토하지 않는다.
- (3) 실제 시범사용에서 혁신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지와 개발 단계를 함께 살펴야 한다.
- (4) 시제품은 이미 대규모 납품실적이 확정된 완성품만을 뜻한다.

19. 교재가 설명하는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범위를 정리한다. 물품·용역·공사를 모두 같은 대상 범위에 넣은 초안을 검토한 설명은?

2026년 6월 교재 309쪽의 대상 범위 설명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계약의 법정 실적 인정은 별도 확인 대상입니다.

- (1)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물품도 물품이 아니라 모두 공사계약 실적으로만 본다.
- (2) 교재는 공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물품은 제외한다.
- (3) 물품과 용역의 범위를 구분하면 우선구매의 사회적 목적이 사라진다.
- (4) 교재는 공사를 제외한 생산품이나 용역 등의 우선구매를 설명하므로 범위를 구분해야 한다.

20. 쌍무계약에서 A의 인도의무는 오늘, B의 대금지급의무는 합의에 따라 다음 달에 이행기가 온다. B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등 별도 사정은 없다. A가 B의 오늘 미지급만을 이유로 동시이행항변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은?

사인 간 일반 쌍무계약이며 선이행 약정이 유효합니다. 불안의 항변 등 별도 사정은 없습니다.

- (1) 쌍무계약이면 이행기를 정했더라도 언제나 양쪽이 동시에 이행해야 한다.
- (2) A는 B의 대금 전액을 포기시킨 뒤에만 인도할 수 있다.
- (3)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변제기에 있지 않으므로 그 미지급만으로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 (4) B가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대금채무는 이미 소멸했다.

21. 계약 X는 정해진 성과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약정한다. 계약 Y는 특정 사무의 처리를 맡기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다. 민법상 전형계약의 기본 구별로 적절한 것은?

각 전형계약의 기본 요소를 단순화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용역계약을 모두 한 유형으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1) X는 위임, Y는 도급의 기본 구조에 가깝다.
- (2) Y에 보수 약정이 추가되면 사무처리 위탁의 성질은 고려하지 않는다.
- (3) 성과물이 언급되는 계약은 모두 매매이므로 X는 도급일 수 없다.
- (4) X는 도급, Y는 위임의 기본 구조에 가깝다.

22. 일부 비용을 계약 전에 확정하기 어려워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을 검토한다. 가장 적절한 준비는?

- (1) 일부 비용만 불확실해도 모든 지급액을 계약담당자의 재량으로 정한다.
- (2) 사후 검토라는 이름만 넣고 증빙과 검토기준은 두지 않는다.
- (3) 사후 검토할 비용항목과 기준·절차를 미리 정해 입찰자가 가격과 위험을 판단하게 한다.
- (4) 먼저 낙찰자를 정한 뒤 계약담당자가 원하는 비용항목을 정산 대상으로 추가한다.

23. 국가에 수입이 되는 계약에서 상대자가 물품을 먼저 받고 대금은 나중에 내겠다고 한다. 다른 법령의 예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교재가 제시한 기본 검토는?

- (1) 관련 법령의 예외가 없다면 대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원칙을 확인한다.
- (2) 상대자가 신속한 인도를 원하면 선납 규정 검토를 생략한다.
- (3) 국가의 모든 계약에는 대금을 뒤에 지급하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 (4) 한 차례 거래 실적이 있으면 법령의 예외를 확인하지 않아도 외상 인도가 허용된다.

24. 법령상 조달청 계약 요청 의무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기관이 전문적인 조달 지원을 받고 싶어 한다. 적절한 해석은?

- (1) 의무 요청 대상에서 벗어난다는 사실과 별도 근거에 따른 요청 가능성은 구별한다.
- (2) 의무 대상이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조달청에 계약 요청을 할 수 없다.
- (3) 기관의 필요만 있으면 법령상 절차·대상 조건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 (4) 요청 가능성이 있으면 모든 구매가 자동으로 의무 요청 대상이 된다.

25. 기관이 소프트웨어 구매 검토에 필요한 전문 지원을 조달청에 요청했다. 이 지원의 성격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 (1) 지원 요청서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예산 없는 사업을 바로 집행할 수 있다.
- (2) 관련 규정에 따른 전문 지원을 받는 것과 기관의 모든 계약·예산 책임을 넘기는 것은 구별한다.
- (3) 조달청의 지원은 물품 창고 보관에만 한정되어 정보화 관련 요청은 개념상 불가능하다.
- (4) 전문 지원을 받으면 기관은 요구사항을 확인하거나 결과를 검토할 책임이 전혀 없다.

26. 전자조달법 제7조의 전자입찰에 관한 설명으로, 확인한 조문이 포괄하는 제출문서와 절차는?

- (1) 경쟁입찰뿐 아니라 수의계약 상대자 선정 절차의 전자 견적서 제출도 포함한다.
- (2) 수의계약의 견적서는 포함하지만 경쟁입찰의 전자입찰서는 포함하지 않는다.
- (3) 전자 방식이면 상대자 선정 절차 없이 제출 즉시 계약이 체결된다.
- (4) 경쟁입찰의 입찰서만 포함하고 수의계약의 견적서는 항상 제외한다.

27. 공기업의 계약금액이 크다는 사정만으로 국제입찰 의무가 확정되었다는 검토서가 작성됐다. 추가로 확인해야 할 핵심 묶음은?

- (1) 대상 기관·계약 목적물·기준금액·적용 협정과 제외 사유이다.
- (2) 금액이 크면 구매 대상이나 적용 협정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는다.
- (3) 법인 로고에 공공기관 표시가 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 (4) 해외 업체가 한 번 문의하면 계약금액과 범위 검토를 생략한다.

28. 교재의 국가계약분쟁 조정 안내에서 신청 자체의 수수료가 없다는 점을 본 업체가, 필요한 시험·감정 등의 사실확인 비용도 언제나 전액 무료라고 이해했다. 적절한 설명은?

- (1) 실비는 담당자가 근거 없이 정하는 벌금이므로 산정자료를 확인할 수 없다.
- (2) 신청 수수료의 유무와 사실확인 등에 소요되는 실비의 부담 규정을 구별한다.
- (3) 시험 비용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조정절차를 이용할 자격을 잃는다.
- (4) 무료 신청이면 어떤 별도 비용도 발생할 수 없다.

29. 계약 종료 시 보증금 산정에서 가분적 인수부분을 제외할지 검토한다. A분은 검사·인수되어 독립 사용 중이고, B분은 현장에 반입됐지만 검사에서 불합격했다. 적절한 판단은?

이 문항은 성질상 분할 가능한 계약의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액을 검토하는 사례이다. 단가계약은 아니며, 지체상금이 전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했는지를 계산하는 문제가 아니다.

- (1) B분이 불합격했으므로 별도로 인수된 A분의 기록도 모두 없던 것으로 본다.
- (2)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금액만 있으면 인수 여부는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 (3) 현장 안에 있으면 B분도 검사·인수된 것으로 자동 처리한다.
- (4) A분과 B분의 법적·사실적 이행 상태를 구별하여 공제 요건을 판단한다.

30. 불공정조달행위에 관한 학습용 절차가 ㉠ 조사, ㉡ 대상 업체의 의견 확인, ㉢ 심의 및 결과 판단, ㉣ 권한 있는 부서의 후속 조치로 구성된다. 이 흐름을 유지한 것은?

세부 기관명과 모든 법정 단계의 순서를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제시된 네 단계의 관계를 묻는다.

-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31. 기존 장비는 요구 성능을 충족하지만 설치 규격이 달라 개조가 필요하다. 공급 가능성을 판단할 때 적절한 검토는?

- (1) 개조의 기술 가능성과 추가 비용·일정을 함께 분석한다.
- (2) 개조 비용은 발주기관이 자동으로 부담한다고 가정한다.
- (3) 설치 규격이 다르면 수정 대안 검토 없이 언제나 포기한다.
- (4) 성능이 같으므로 설치 규격의 차이는 무시한다.

32. 공급중단 대비업체 A와 B는 서로 다른 법인이지만 핵심 부품을 같은 공장 한 곳에서 받는다. 비상계획의 취약점은?

- (1) 동일 부품을 쓰면 모든 공급계약이 무효다.
- (2) 상류 공장 중단 때 두 공급경로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3) 구매계약 수가 두 개이므로 비상계획이 필요 없다.
- (4) 법인이 다르면 공급위험은 완전히 독립적이다.

33. 현재 유효한 인증이 있지만 공급기간 중 만료될 예정이다. 참가·이행의 세부 요건은 공고에서 확인한다는 전제에서, 적절한 사전 조치는?

- (1) 현재 유효하므로 계약기간 전체가 자동 보장된다.
- (2) 인증서의 만료일을 자체 수정해서 사용한다.
- (3) 만료 예정이면 모든 입찰에 영구히 참여할 수 없다.
- (4) 필요한 유효기간과 갱신 가능성·소요시간을 함께 점검한다.

34. 종이 기록 보관 장비 시장에서 전자기록 서비스가 같은 업무 목적의 대안으로 확산된다. 5가지 경쟁세력모형에서 가장 직접적인 분석 항목은?

- (1) 원재료 공급자의 교섭력
- (2) 대체재의 위협
- (3) 기존 장비업체의 회사명 변경
- (4) 같은 장비를 만드는 신규 업체의 진입

35. 제조회가 견적의 재료량과 공정별 노무량이 실제 사양을 반영하는지 확인하려 한다. 우선 연결할 자료는?

- (1) 경쟁사 광고의 디자인 취향만
- (2) 사업예산 총액을 같은 비율로 임의 분할한 표
- (3) 규격·제작도면·공정도와 배치인원 등 산정 근거
- (4) 회사 전체 매출총액만

36. 지난해는 공급과잉이었으나 올해 여러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다. 공급전략의 모니터링으로 적절한 것은?

- (1) 공급여건과 협상력 변화에 따라 가격·물량·일정 가정을 재검토한다.
- (2) 공장 중단은 거래조건과 관계가 없다고 본다.
- (3) 작년에 수립한 구매자 우위 판단을 고정한다.
- (4) 가격변화만 보고 공급능력 변화는 조사하지 않는다.

37. 가상의 공고가 '해당 세부품명의 제조업체 등록'을 명시적으로 요구한다. 단순 유통업체는 그 품목을 공급할 수 있으나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판단은?

문제에 명시한 가상의 조건·수치만 계산 전제로 사용합니다. 실제 환율·법정 수수료·평가배점·기간을 뜻하지 않습니다.

- (1) 제조사에서 사 올 수 있으면 제조업체 등록과 같다.
- (2) 물품 가격이 저렴하면 등록 구분을 생략한다.
- (3) 다른 세부품명 제조 등록을 해당 품목 등록으로 간주한다.
- (4) 물건을 조달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제조업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38. 이름이 비슷한 구매기준 개정안이 여러 기관에서 검색되었다. 의견을 제출할 대상을 구분하는 식별정보의 조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검색 결과의 첫 번째 순위와 조회수만 확인한다.
- (2) 소관 기관·공고번호·예고명·의견접수기간을 함께 확인한다.
- (3) 파일 용량과 다운로드 횟수만 확인한다.
- (4) 같은 제목에 "구매"라는 단어가 있으면 같은 안건으로 합친다.

39. 사전규격의 절차 적정성을 검토하면서 국가기관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기준을 섞어 판단했다. 우선 필요한 작업은?

- (1) 공급업체가 선호하는 규정을 임의로 선택한다.
- (2) 발주주체와 적용 법령·규정 체계를 먼저 식별한다.
- (3) 가장 오래된 자료를 항상 우선한다.
- (4) 이름에 공공이 있으면 모든 기관에 같은 세부규칙을 적용한다.

40. 학습용 공고는 특정 부품의 공급협약금액 4,000만 원을 고정하고, 나머지 제작·설치비는 입찰자가 부담하도록 정했다. 업체가 총 6,000만 원에 투찰하고 나머지 직접비를 1,500만 원으로 예상한다. 세금·간접비를 제외한 잔여액은?

금액과 고정 협약조건은 가상이며 부당한 특정규격의 적법성을 전제하지 않습니다.

- (1) 500만 원이다.
- (2) 1,500만 원이다.
- (3) 2,000만 원이다.
- (4) 4,000만 원이다.

41. 한 업체의 서면 질문에 답하면서 모든 참가예정자에게 공통 정보를 배포하려 한다. 교재의 입찰자 회의 운영 지침에 가까운 방식은?

- (1) 질문한 업체의 식별정보를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않고 공통 질의 내용과 공식 답변을 공유한다.
- (2) 질문한 업체를 평가에서 감점해 질의를 줄인다.
- (3) 답변은 질문 업체에만 보내고 다른 업체의 접근을 막는다.
- (4) 질문 업체의 담당자 개인정보까지 모든 업체에 공개한다.

42. 가상 공고는 가격입력란에 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을 적도록 정했다. 공급가액 4,800만 원과 부가가치세 480만 원을 제안할 때 입력할 금액은?

세액·입력조건은 사례에서 주어졌으며 면세·사후정산은 다루지 않습니다.

- (1) 4,800만 원이다.
- (2) 480만 원이다.
- (3) 5,280만 원이다.
- (4) 4,320만 원이다.

43. 국가계약 공고가 지정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서 제출만 허용한다. 업체는 마감 전에 담당자의 일반 이메일로 가격서를 보내고 시스템에는 제출하지 않았다. 적절한 판단은?

- (1) 담당자가 이메일을 읽으면 지정시스템 접수와 같아진다.
- (2) 정해진 전자 제출방식에 따르지 않은 입찰의 무효 여부를 검토한다.
- (3) 가격이 적혀 있는 전자문서는 어느 경로든 동일하게 접수된다.
- (4) 파일 확장자가 PDF이면 제출경로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44. 직접계약 대상으로 검토 중인 업체에 기관이 구두로 제작을 서두르라고 했으나 규격·금액·납기·계약 권한 있는 승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적절한 준비는?

- (1) 수의계약 검토만 시작하면 구두로 언급한 모든 금액이 확정된다.
- (2) 상대방을 하나 정했으므로 물품 규격은 없어도 된다.
- (3) 권한 있는 담당자를 통해 핵심 조건과 계약체결 절차를 명확히 한 뒤 이행을 준비한다.
- (4) 제작을 먼저 하면 업체가 원하는 조건을 모두 강제할 수 있다.

45. 평가위원이 업체로부터 공고된 제출경로를 거치지 않은 "추가 실적자료"와 유리한 채점 요청을 개인 메신저로 받았다. 공정성 확보를 위한 처리는?

- (1) 자료를 다른 위원에게만 비공개 전달하면 공식 접수와 같아진다.
- (2) 자료가 많을수록 정확하므로 해당 업체에만 추가 점수를 준다.
- (3) 접촉을 숨기는 대신 낮은 점수를 주어 스스로 균형을 맞춘다.
- (4) 개인 경로의 자료를 임의로 채점에 반영하지 않고, 접촉 사실을 규정에 따라 보고·기록한다.

46. 기술협상팀이 협상 결렬 시 실행 가능한 다른 해결책을 미리 검토한다. 협상에서 말하는 BATNA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 (1) 협상이 성립하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실행 가능한 대안
- (2) 협상 상대방의 비밀 가격을 알아내는 기법
- (3) 합의된 계약서의 최종 페이지에 찍는 승인 표시
- (4) 상대방에게 처음 제시하는 최대 요구조건

47. 가상 심사기준은 공고일 이전에 완료된 납품실적만 인정한다. A는 공고일 전에 3건을 완료했고 이후 2건을 더 완료했다. 이번 인정실적 건수는?

완료실적 인정기간과 건수는 가상 기준입니다.

- (1) 공고일 이후 실적이 생겼으므로 앞선 3건도 인정되지 않는다.
- (2) 5건이다.
- (3) 2건이다.
- (4) 3건이다.

48. 가상 희망수량 입찰에서 같은 물품 300개를 구매한다. 모두 허용 단가 이내이고, A는 개당 9,000원·100개, B는 9,200원·150개, C는 9,500원·200개를 제시했다. 낮은 단가 순으로 배정하며 마지막 업체는 필요한 수량만 배정할 수 있다. 배정은?

학습용 가상 규칙입니다. 세 업체 모두 적격이며 마지막 업체의 일부수량 배정이 허용됩니다.

- (1) A 0개, B 100개, C 200개
- (2) A 100개, B 150개, C 200개
- (3) A 100개, B 100개, C 100개
- (4) A 100개, B 150개, C 50개

49. 규격·가격 동시입찰에서 두 자료를 함께 제출하였다. 규격 적합자를 대상으로 가격을 비교하는 적용 절차를 바르게 이해한 것은?

- (1) 규격에 적합하면 가격과 관계없이 모두 같은 금액으로 낙찰된다.
- (2) 제출 시점이 같아도 규격 적합 여부의 관문과 가격 비교를 구별하여 적용한다.
- (3) 가격이 가장 낮으면 규격 부적합도 적합으로 처리한다.
- (4) 동시에 제출했으므로 규격자료는 보관만 하고 평가하지 않는다.

50. 탈락 원인을 분석하면서 ㉠ 점수표 합계에서 한 항목 5점이 누락된 경우와 ㉡ 모든 항목이 합산되었지만 정성평가가 기대보다 낮은 경우를 구분한다. 적절한 분석은?

- (1) ㉠은 계산·전사 오류를 확인하고, ㉡은 평가기준·제출내용·판단근거를 검토한다.
- (2) ㉡은 기대보다 낮았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확정된다.
- (3) 둘 다 무조건 계산기 오류로 처리한다.
- (4) ㉠은 평가자의 재량이므로 합계 누락도 검토할 수 없다.

공공계약관리

51. 서버 설치계획에 공급자의 운송·설치 일정만 있고 기관이 제공해야 할 전원·출입허가·설치 공간의 준비일은 없다. 장비 자체는 예정대로 생산되고 있다. 계획의 가장 중요한 누락은?

- (1) 기관 준비사항은 공급자의 생산계획과 무관하므로 누락이 아니다.
- (2) 생산 완료일을 계약 종료일로 기재하지 않은 점
- (3) 물품가격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비가격 조건은 계획에서 제외한 점이 적절하다.
- (4) 기관 측 선행조건의 담당자와 완료기한을 공급 일정에 연결하지 않은 점

52. 학습용 시험계획에서 장비 한 대를 A작업이 1~3일, B작업이 3~5일에 각각 하루 종일 사용한다. 작업별 연속 3일이 필요하며 장비 추가는 불가하다. B는 6일까지 끝내도 후속 공정에 영향이 없다. 계약기한을 바꾸지 않는 자원 조정안은?

일수·공정·완료기한은 가상 계획입니다. A 일정은 고정이고 B의 6일 완료가 허용됩니다.

- (1) 장비가 한 대여도 3일에는 A와 B를 각각 하루 종일 수행한 것으로 계획한다.
- (2) B를 5~7일로 옮기고 후속 공정의 기한도 승인 없이 늦춘다.
- (3) B를 4~6일로 옮겨 장비 사용 중복을 해소한다.
- (4) B의 필요 시험기간을 근거 없이 2일로 줄인다.

53. 물가변동 조정에서 기준상 요건을 충족한 날, 계약상대자가 조정을 청구한 날, 기관이 승인한 날이 서로 다르다. 검토자가 세 날짜를 모두 승인일로 기록했다. 적절한 보완은?

- (1) 청구가 있었다면 그날 이전에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것으로 본다.
- (2) 승인일이 가장 늦으므로 과거 청구 및 요건 충족 기록은 삭제한다.
- (3) 조정기준일·청구일·승인일의 의미를 구분하여 각각의 요건과 적용 범위를 검토한다.
- (4) 요건 충족일은 계약담당자가 임의로 가장 유리한 날짜를 선택한다.

54.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업 취소로 제조계약을 종료한다. 적용 조건은 종료 전 실제 투입된 인력·재료·장비의 철수비용을 정산 대상으로 정했다. 제출 항목 중 이 비용에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정산 항목을 지문에서 지정했습니다. 다른 손실의 청구 가능성 전체를 판단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 (1) 종료 통보 전에 현장에 투입한 장비를 회수하기 위해 실제 발생한 운송비이다.
- (2) 계약 체결 전부터 보유한 공장 건물의 매입가격 전액이다.
- (3) 업체의 모든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한 일반 영업비이다.
- (4) 앞으로 새로 고용할 예정이던 인력의 1년치 급여 전액이다.

55. 여러 모델을 생산하는 업체가 납품목록에 제품명만 적고 모델·일련번호를 남기지 않았다. 동일 제품명 아래 성능과 옵션이 다른 모델들이 존재한다. 인도 단계에서 우선 보완할 것은?

- (1) 운송장 수량만 맞으면 납품물 식별은 계약종결 후에 한다.
- (2) 계약 대상과 실제 인도물을 대조할 수 있도록 모델·일련번호 등 식별정보를 연결한다.
- (3) 기재가 간단할수록 검사시간이 줄어드므로 제품명만 유지한다.
- (4) 제품명이 같으면 옵션·모델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다.

56. 기관의 보안구역 작업 계약은 사전 등록된 작업자만 출입하도록 적법하게 정했다. 업체가 사전 통보 없이 다른 직원을 보냈으며 경력은 기존 직원보다 길다. 적절한 조치는?

사전 등록 조건이 유효하고 긴급출입 예외는 없습니다.

- (1) 경력이 더 길면 출입 등록 요건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2) 출입만 허용한 뒤 원래 등록자의 이름으로 작업기록을 남긴다.
- (3) 경력과 별개로 새 작업자의 등록·출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 (4) 같은 업체 직원이면 이름 변경에 관한 절차가 불필요하다.

57. 제조 중 핵심 공정의 장애로 납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생겼다. 아직 지연 원인과 책임은 확정되지 않았다. 공급업체의 적절한 초기 관리행동은?

책임 귀속·지체상금 면제의 법률판단은 제외합니다.

- (1) 상황과 영향 자료를 정리해 알리고, 복구 대안과 일정 영향을 협의한다.
- (2) 실제 납기가 지난 다음까지 상황을 알리지 않는다.
- (3) 물량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계약상 품질기준을 임의로 낮춘다.
- (4) 원인 분석 전부터 모든 지연 책임이 발주기관에 있다고 통보한다.

58. 서비스 체계를 ㉠ 기관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수준 약정, ㉡ 제공자 내부 팀 간 지원 약정, ㉢ 제공자와 외부 지원업체 간 뒷받침 계약으로 나누었다. 교재 용어의 적절한 연결은?

- (1) 세 약정은 모두 이용자와 공급자 간 동일한 SLA만 뜻한다.
- (2) ㉠ SLA, ㉡ OLA, ㉢ UC
- (3) ㉠ OLA, ㉡ UC, ㉢ SLA
- (4) ㉠ UC, ㉡ SLA, ㉢ OLA

59. 학습용 계약금액은 1억 원, 지급된 선금은 3천만 원이다. 이번에 인정된 기성대가가 2천만 원이고, 선금정산액을 "선금액 × 이번 기성대가 ÷ 계약금액"으로 계산한다. 이번 선금정산액은?

가상 수치이고 산식은 지문에 명시했습니다. 이전 정산이나 다른 공제는 없습니다.

- (1) 3천만 원
- (2) 600만 원
- (3) 300만 원
- (4) 2천만 원

60. 종결 정산의 기준 계약금액을 정한다. 최초 계약 2,000만 원에 유효한 변경계약으로 300만 원을 증액했고, 업체는 별도로 100만 원을 더 요구했으나 승인·합의되지 않았다. 기지급금 공제 전 확정 계약금액은?

미승인 요구의 실체적 권리 유무는 미판단 상태이며 이 문제는 확정 계약금액의 기록만 다룹니다.

- (1) 변경으로 늘어난 300만 원만 계약금액이다.
- (2) 최초 계약만 존재하므로 2,000만 원이다.
- (3) 2,300만 원이며, 미승인 100만 원은 확정금액과 구분해 검토한다.
- (4) 요구서가 있으므로 2,400만 원 전체가 확정되었다.

61. 교재에 인용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의 다른 중앙관서 활용과, 당해 관서 업무에만 활용하는 등록을 구분한다. 바른 이해는?

- (1) 관서 전용 등록을 받으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낙찰이 동시에 확정된다.
- (2) 어느 관서의 어떤 등록이든 모든 중앙관서에 예외 없이 같은 효력이 있다.
- (3)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가 사용할 수 없다.
- (4) 일반적인 공동활용 등록과 해당 관서 전용 등록의 효력 범위를 구별해야 한다.

62. 물품구매 공고에 규격 문의 전화번호는 있지만 입찰 관련 비리·불공정행위의 신고 안내가 빠져 있다. 교재의 공고사항을 반영하려면 무엇을 보완하는가?

- (1) 기술 문의와 구분하여 비리·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
- (2) 신고는 낙찰자에게만 허용된다고 안내한다.
- (3) 규격 문의 전화가 있으므로 신고에 관한 안내는 같은 항목으로 이미 충족된다.
- (4) 신고 접수를 없애고 공고 파일 크기만 줄인다.

63. 적용 요건을 충족하여 1인 견적이 허용되는 소액 물품계약이다. 담당자는 가격의 적정성을 더 확인하려고 다른 업체의 견적도 비교하려 한다. 1인 견적 허용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금액·기업유형별 실제 한도는 묻지 않고 1인 견적 허용 요건이 이미 충족된 사례입니다.

- (1) 먼저 견적을 낸 업체에 계약 체결을 요구할 독점권이 생긴다.
- (2) 1인 견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필요한 추가 견적 비교 자체를 금지하는 상한은 아니다.
- (3) 1인 견적이 가능하면 다른 업체의 가격을 확인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4) 1인 견적 허용은 계약의 가격과 품질 확인도 면제한다.

64. 수요기관이 외자 조달을 요청한 뒤 규격을 검토·확정하고 계약방법을 정하여 입찰을 진행하는 흐름을 정리한다. 교재의 기본 순서에 맞는 것은?

- (1) 물품 인수 → 최초 조달요청 → 입찰공고 → 규격 검토
- (2) 조달요청 → 계약 전액 지급 → 규격 공개 → 계약방법 결정
- (3) 입찰공고 → 대금 결제 → 최초 규격 검토 → 조달요청
- (4) 조달요청 → 구매규격 공개·검토 → 구매결의·계약방법 결정 → 입찰공고·입찰

65. 부품 단종으로 대체품을 제안했다. 가격은 같지만 전압·장착 치수·유지관리 방식이 다르다. 변경 검토에 가장 적절한 자료는?

- (1) 같은 가격이라는 견적서 한 장만 제출한다.
- (2) 계약 기능·호환성·안전·유지관리 조건과 대체품의 차이를 비교한 검증자료
- (3) 일단 바꾼 후 검사기록에 원래 부품명을 유지한다.
- (4) 업체가 최신품이라고 표시하면 모든 계약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66. 제안요청서가 기술적 수행계획과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계획을 각각 요구한다. 업체는 "기술 설명이 충분하므로 근로조건 계획은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적절한 보완은?

두 항목이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례이다. 모든 용역에 동일한 배점이 적용된다고 일반화하지 않는다.

- (1) 외주근로자는 제안업체가 직접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공고가 요구해도 검토에서 제외된다.
- (2) 근로조건을 설명하면 기술능력 설명은 더 이상 제출할 수 없다.
- (3) 기술적 수행능력과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별도 평가 주제이므로 두 요구에 각각 대응하는 계획을 제시한다.
- (4) 근로조건 계획은 제안가격을 기재하는 것만으로 자동 충족된다.

67. 한 공식 공고는 발표자료 등 평가 참고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도록 정했다. 제안서 등 필수 문서는 정상 제출됐고 발표자료만 빠졌다. 이 조건의 적용은?

- (1) 발표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제출이 무효이다.
- (2) 제안서도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한다.
- (3) 발표자료가 없어도 최고점을 보장한다.
- (4) 정상 제출된 제안서와 그 안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68. 공식 입찰공고는 2025년 나라장터 개편 후 종전 e-발주 기능이 나라장터에 통합됐다고 안내한다. 학습자가 확인할 경로는?

- (1) 과거 독립 시스템 주소만 고정 사용
- (2) 제안서 제출 대신 일반 메일만 사용
- (3) 기능 통합을 제안서 제출제도 폐지로 이해
- (4) 현재 공고가 안내하는 나라장터의 해당 업무 기능

69. MAS 상품의 과거 화면을 저장해 둔 담당자가 그 자료만으로 납품요구를 하려 한다. 현재는 해당 품목의 계약 종료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주문 전에 필요한 확인은?

- (1) 종합쇼핑몰 상품은 최초 등록 후 계약상태가 바뀌지 않는다고 본다.
- (2) 과거 화면에 가격이 있었으면 현재도 같은 조건으로 주문할 수 있다고 본다.
- (3) 현재의 계약 유효상태·등재 여부와 납품요구 가능 조건을 확인한다.
- (4) 담당자가 저장한 날짜가 최신이면 계약 종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70. 공급자가 원가 상승을 이유로 기존 MAS 계약단가를 자신의 거래명세서에서 먼저 인상했다. 적절한 검토는?

- (1) MAS 계약은 어떤 경우에도 가격 조정에 관한 규정이 존재할 수 없다.
- (2) 새 거래명세서를 발행하면 조달청의 계약기록도 법적으로 자동 수정된다.
- (3) 원가가 올랐다는 주장만 있으면 공급자가 계약단가를 일방적으로 바꿀 수 있다.
- (4) 관련 가격 조정의 요건·신청·계약 변경 절차와 적용 시점을 확인한다.

71. 기존 설비와의 호환을 이유로 MAS 2단계경쟁 예외를 검토한다. 적절한 준비는?

- (1) 기존 제품의 제조사가 익숙하면 호환 필요를 자동 입증한 것이다.
- (2) 예외 조항이 있으므로 어떤 신규 설비도 같은 사유로 직접 주문한다.
- (3) 호환 필요와 대체 가능성을 설명하고 적용 규정이 정한 예외 인정 절차를 확인한다.
- (4) 호환이라는 말을 쓰면 요청·심의 등 필요한 절차도 면제된다.

72. 가상 평가 지표는 “평가대상 납품요구 건수 중 기한 내 완료된 건수의 비율”이다. 대상 25건 중 22건이 기한 내 완료됐다. 비율은?

실제 MAS 공식 산식·등급을 제시하지 않는 가상 성과지표이다.

- (1) 88%
- (2) 12%
- (3) 22%
- (4) 113.64%

73. 상용화된 용역이지만 고객마다 세부 과업이 달라 업계 공통규격을 확정하기 어렵다. 교재의 MAS와 카탈로그계약 설명을 비교한 것은?

- (1) 공통규격이 없으면 상용화된 용역도 공공기관이 구매할 방법이 없다.
- (2) MAS와 카탈로그계약은 규격의 확정 가능성에 관한 설명도 동일하므로 구분하지 않는다.
- (3) 공통규격 확정이 곤란한 상용 용역에는 카탈로그계약의 적용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다.
- (4) 카탈로그계약은 업체가 배포한 광고책자를 사는 계약만을 뜻한다.

74. 공사가 예산 안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안전계획 이행과 자재 품질시험 기록이 부족하다. “예산을 지켰으므로 기술관리도 적정하다”는 보고에 대한 검토는?

- (1) 예산 집행과 별개로 품질·안전 등 기술관리 의무의 실제 이행을 확인한다.
- (2) 품질·안전 기록이 없더라도 준공 사진 한 장으로 모두 갈음한다.
- (3) 공공공사는 계약금액만 맞으면 안전관리를 사후에 임의 선택한다.
- (4) 공사비를 절약하면 품질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된다.

75. 운영 중인 병원의 보수공사를 공고하려 한다. 실제로는 야간 작업과 출입 통제가 필요하지만 공고 자료에는 빈 건물에서 주간 작업하는 것처럼 적혀 있다. 입찰자의 공사비·공정 산정에 필요한 보완은?

- (1) 실제 제약은 모든 공사에 같으므로 공고할 필요가 없다.
- (2) 야간 작업이 필요하면 시공에 필요한 업종 등록은 확인하지 않는다.
- (3) 현장조건은 낙찰 후 처음 알려야 업체의 건적이 낮아진다.
- (4) 작업 가능시간, 출입·소음 제한 등 확인된 현장조건을 공고·설명자료에 반영한다.

76. 교재는 적격심사 낙찰하한율을 수행능력 점수가 만점일 때 허용되는 최저 투찰가격 한계와 연결해 설명한다. 업체가 “하한율만 넘기면 내 수행능력 점수와 관계없이 낙찰된다”고 판단했다. 적절한 검토는?

- (1) 하한율의 산정 전제와 업체의 실제 수행능력 점수·총점 충족을 구분한다.
- (2) 하한율은 계약보증금의 납부비율과 같은 뜻이다.
- (3) 하한율은 모든 공사의 고정 이익률이므로 심사점수와 무관하다.
- (4) 하한율 이상이면 수행능력 점수는 언제나 만점으로 인정된다.

77. 교재가 공사 입찰가격 평가식의 A값 구성으로 제시하는 항목을 정리한다. 다음 중 그 목록에 포함되는 것은?

제공 교재의 A값 구성 설명을 묻습니다. 실제 입찰은 공고와 현행 산식에서 제시하는 A값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 (1) 일반관리비와 이윤이다.
- (2)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이다.
- (3) 전체 부가가치세와 임의 이익준비금이다.
- (4) 토지 취득대금과 회사 배당금이다.

78. 입찰 총액은 적정 범위지만 내역상 초기 공정 단가가 과도하게 높고 후속 공정 단가는 매우 낮다. 물량 변화나 기성지급 시 기관에 불리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종합심사에서 필요한 검토는?

- (1) 총액과 별도로 비목별 단가의 균형·적정성과 적용 심사기준을 확인한다.
- (2) 높은 단가 항목이 하나 있으면 근거 규정 없이 즉시 전체 입찰을 무효로 한다.
- (3) 낮은 단가 항목만 삭제하면 같은 총액의 입찰로 유지된다.
- (4) 총액이 예정가격 이하이면 개별 단가 구조는 언제나 무관하다.

79. 공사 착수 전에 인접 구조물의 균열 상태를 기록하지 않았다. 이후 균열이 발견되자 기존 결함인지 시공으로 발생했는지 다툼이 생겼다. 착공관리에서 필요했던 기록은?

- (1) 시공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면 사전 현황기록은 의미가 없다.
- (2) 공사 전 현장·인접 시설 상태를 식별 가능한 사진과 조사자료로 남긴 기록
- (3) 분쟁이 발생한 뒤 착공 전 사진인 것처럼 날짜를 바꾸어 만든 기록
- (4) 준공 후 외관 사진만 있으면 공사 전 상태도 항상 확인된다.

80. 가상 하도급계획 심사는 하도급금액이 ㉠ 해당 부분 입찰금액의 80% 이상이고 ㉡ 해당 부분 예정금액의 60% 이상이어야 한다. 입찰금액 40, 예정금액 50, 하도급금액 31이다. 판정은?

비율·금액은 독자적으로 만든 가상 기준이며 실제 하도급 적정성 심사의 법정 수치를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 (1) $31 \div 50$ 이 60% 미만이므로 둘 다 미달한다.
- (2) $31 \div 40$ 이 80% 이상이므로 둘 다 충족한다.
- (3) ㉠은 미달하고 ㉡은 충족하므로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
- (4) 두 비율을 평균하면 되므로 하나의 기준이 미달해도 무관하다.

답안 기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